

# 민주 “한동훈,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 ‘尹 아바타’ 가늠자”

### “범죄 있으면 수사하는 게 국민 상식” 압박... 반사이익론 경계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데 혁신할 수 있겠나,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겠나, 검사 공전을 배제할 수 있겠나”라며 “한동훈 비대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분은 법무부 장관일 때도 그냥 어떤 공직자로서의 공명정대함이나 중립성이 아니라 한쪽을 강하게 편드는 편향성을 보여줬다”며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니 더 편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의 처리를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목소리들도 터져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전 장관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이 늘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말한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서 “그동안 한 전 장관은 검사로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법정에 섰겠지만, 이제는 건건이 ‘민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가 ‘윤석열 아바타’인지 아닌지 가늠할 가장 실험대이자 중요한 실험대”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나왔던 반사이익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 자체 혁신을 토대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땀방울이라는 우리 안의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을 멋지게 통합하는 실력을,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썼다.

장 의원은 라디오에서 “등판 전에는 ‘올 테면 오라’는 메시지로서 땀방울만, 등판 후에는 총력전”이라며 “등판 후에 방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조금 더 경계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수용 등 한 전 장관이 해야 할 숙제를 줘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여야 민생법안 ‘2+2 협의체’ 제자리걸음

### “법사위 등서 논의 계속”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의 기구인 ‘2+2 협의체’가 26일 가동됐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홍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하고자 가져온 법안들을 일괄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도 “2+2에서 협상하자고 각각 10개의 의제를 가져다 봤는데 각 상임위에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협의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회의를 마치 막으로 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해당 상임위에서의 자율적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2+2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디딤돌 장치가 돼야 법안 처리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법안 처리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아 있다. 또 2+2 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가 가능하다”며 “양당이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중 수출길 막힌 日 가리비 한국 오나

### 정부 “수출 규제 유지”

정부는 26일 일본이 중국의 수입 금지로 중국 수출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측의 계획에 불응하며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때마다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이 가리비 수출을 중국 대신 한국, 유럽연합(EU)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측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온 방사능 검사를 한 치의 빈틈 없이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잡힌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를, 그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때마다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 안도걸, 광주 동남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5·18 정신은 세계 민주화의 길을 열었던 역사적 동력”이라며 “이 에너지를 발전시켜 광주를 ‘글로벌 명품 부자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총선 광주 동남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 진출해 광주 원도심을 ‘글로벌 명품 부자도시’로 탈바꿈시키고, 동구와 남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멋진 동네로 만들겠다”며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경제문화 부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러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곧바로 경제·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34년간 경제·재정 전문 공직자로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살려 당의 경제 분야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은 “민주당이 자체 혁신을 통해 수권 역량을 키우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정권 교체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춧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

## 민주-정의 “김건희 특검 추천 주체 與 배제”

### 법안 내용 수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본회의의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민주당과 정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김 여사 특검 법안 문구 수정에 대해 협의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을 예정대로 통과시켰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발의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추천권 배제 대상 교섭단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추천 권한을 아예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을 ‘원천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개의 조문을 수정하려는 이야기가 양당 간에 오가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대통령의 탈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추천 방식 부분을 수정,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